

현대중 군산공장, 울산에 흡수될 가능성

내년 상반기 이후 작업 물량 없어... 산단 인근 소룡동 등에 직격탄

올 1분기에 현대중공업 관련 기업이 수주한 선박이 총 6척에 머무르고 있어 자칫 군산공장이 울산공장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글로벌 조선업체의 수주 가뭄이 이어지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물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군산공장은 올해 선박 13척을 건조할 계

획이며 내년 상반기 이후 작업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비율이 80%인 군산공장(울산공장 협력사 40%)의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단 인근 오식도동이나 소룡동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선박 수주가 미흡할 경우 군산공장이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

자 문동신 군산시장은 현대중공업 본사 등을 방문해 물량 배분 등을 요청할 계획으로 입장을 협의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조선소의 사무직 직원이 타이트하게 조정되고 생산직 위주로 인력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회사 방침이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 관계자는 "현재 감축 계획 등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 기간이나 정확한 인원 등 회사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희망퇴직을 시행한 뒤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조선소는 2010년 준공 후 선박 수출은 총 70척(6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는 16척(LPG 운반 5, 벌크 2, 정유제품운반 1, 원유운반 2, 대형원유운반 4, 초대형 광석운반 2)을 건조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더민주, 가슴기 살균제 국회 차원 적극 대응

김종인 대표, 특별법 제정·청문회 약속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화답하며 야당 정체성을 지적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안전 이슈에 대한 빠른 대응에 나서면서 국회 주도권을 점점하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세간의 공분을 샀던 '가슴기 살균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약속하면서 가슴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검토를 공언했다. 아울러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기업 횡포와 반윤리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더민주는 가슴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슴기 살균제 특별법은 김 대표 체제에서 공언한 1호 특별법이다. 김 대표가 전날 이와 관련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김 대표가 수 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요한 사안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다"는 데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비대위 때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만큼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나 청사진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가슴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경 대변인은 "구체적인 플랜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표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차차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 제정까지의 시간은 그리 오래걸리지 않는다. 지금 준비 중이다. 20대 국회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슴기 살균제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수 있다. 김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경제민주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김 대표의 평소 지론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총선 이후 여당이 지도부 구성도 못하고 지리멸렬하고 있는 이 때 더민주는 파병에 외닿는 국민 안전 이슈를 신속히 제기하며 1당으로서의 무게감을 높이고 있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의 호남참패 원인?

호남 총선평가 성찰과 대안 토론회

김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주 비례대표 파문 등도 꼽아

김성주 의원 "국보위 참여 논란도 제기돼 지원방문 퇴색"

더불어민주당의 28일 '호남 총선평가 성찰과 대안' 토론회는 김종인 대표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더민주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강기정·홍중화 의원 주축로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더민주가 20대 총선에서 호남의석 3석을 얻는 참패를 당한 것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고, 김종인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주를 이뤘다.

발제자로 나선 안일원 리서치부 대표는 호남 참패의 원인으로 ▲무기력한 선대위와 김종인 위원장의 독선 ▲공천 참사에 따른 공조진 분열 ▲비례대표 파문 ▲광주 북갑에서 출마한 정준호 발인 파문(문재인 대선 불출마요구) ▲호남 정책 및 전략 부재 ▲위기관리시스템 부재 ▲일관성 있는 메시지 및 캠페인 전략 부재를 꼽았다.

안 대표는 "현역 의원 컷오프와 후보 등록 마감일 직후인 3월2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사이 발생한 주요 이슈들이 정당 지지도와 지역구 후보지지도의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이 시기는 비례파동 직후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간 '당 정체성' 신경전이 불거졌던 때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호남 확대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왔다"며 "2012년 대선 경선과 2015년 전대에서 노출된 호남 확대

'무기력한' 선대위 · '김종인' 독선 · '공천' 참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호남 총선 평가 성찰과 대안 토론회에서 김성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론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전북 전주 병 선거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당선자에게 패배한 김성주 의원은 발제를 통해 더민주 호남 패배의 원인으로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셀프공천'과 비례대표 공천파동, 김 대표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전격 논란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김 대표의 지원 방문은 셀프공천 논란으로 희석되고,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혼란과 실망이 이어졌으며, 지속적으로 5공 시절 국보위 참여 논란이 제기돼 퇴색해 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 방문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지

지자 결집 효과와 더민주 지지층 결집 효과 동시에 있었다"며 "득실을 따진다면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 나주·화순에서 낙선한 신정훈 의원은 토론회로 나서 "당의 새 지도부가 민주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주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정청래·강기정 의원을 컷오프하는 과정이 일부에는 시련함을 줬을 지 모르지만, 김종인 지도부에 대한 실망을 고착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호남 선거판은 국민의당이 완전 주도했다"며 "나주의 경우 박지원 의원이 5번, 안철수 대표가 2번, 장병완 주승

용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까지 합해 수십 번을 왔는데, 우리 당 지도부는 단 한 사람도 안 왔다. 유일하게 나주에 왔던 것이 (낙선자지만 모인) 더졌유세단"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계호 비대위원은 "(친노 호남확대론이) 종편이나 친노패권주의 때들어대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논리일 수 있지만 인식은 그렇게 바뀌었다"며 "(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을 했는데, 그 발언이 선거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주 기자

국민의당 원내부대표 김관영 지명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김관영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지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관영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전화를 걸어와 당이 중요한 시기인데 같이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중앙과 소통하면서 함께 갈 것"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28일 무주군 군민체육센터에서 '제14회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하며, 지역발전의 모든 부분들은 중앙과 소통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전북의 3당체제는 선거를 통해 보여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그 심판을 받들어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이 힘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의 자치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계신 전라북도 시·군의원협의회 우원규회장을 비롯한 시·군의 의장단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의당은 전북의 제1야당으로서 시·군의원님들과 더불어 함께 지역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국책은행 구조조정 지원 여력 선제적 확충을"

박 대통령 "선별적 양적 완화 방식 적극 검토 필요"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조순·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 기업 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다른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경우 현재도 한국은행의 출자가 가능하지만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를 위해서는 산업금융채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을 통해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한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게 되면 부실채권을 처리할 여력도 커지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관계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실직자들에게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투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내수 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가 확대돼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과 기업에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 경제 여건을 볼때 우리 수출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야 한다"며 "지난달 발표한 소비재 수출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란 경제 제재 해제, 브라질 리우 올림픽 같은 새로운 기회를 잘 살려서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달 1~4일 예정된 이란 국민방문과 관련해서는 "이란은 과거 우리 근로자들이 열사의 땅에서 땀을 흘려서 오늘날의 경제 기반을 만들었던 곳인데 국제 제재가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제대로 감소했던 양국 교역을 정상화시키고 철도·항만·발전·정유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이란 방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서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 부처는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고 소관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주 기자

새누리-국민의당 "임시공휴일 지정 환영"

새누리당은 28일 정부의 다음달 6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 "침체된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의미있는 결단이자 적극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경제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도 28일 정부가 다음달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재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만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자영업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못내 아쉽다"며 "한마디로 갑작스런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으로 설 사람도 일할 사람도 혼란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 "이무조건 대통령 지지를 제고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이번 황금연휴 기간 동안 소비 촉진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반등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광주시장 비서실 시의회 행감 만나

운영위 소관 이관 움직임 시의 반응은 '대략난감'

광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비서실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할 움직임을 보여 광주시가 긴장하고 있다.

시의회 방침이 현실화되면 시장 비서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원회 직무 조정 연구 TF팀'은 자치행정국에 속해 있던 시장 및 시장비서실 소관 사항을 의회 운영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TF팀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도 국회 운영위 소관이며,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상임위 이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 비서실은 자치행정국에 속해 의회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운영위가 따로 비서실을 분리해 직접 행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운영위는 그동안 의회 사무처 1개만 행감했다.

시의회의 계획대로라면 비서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나 결정사항 등의 배후(?)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성주 기자